

문 대통령, 대구 갔다...“바이러스와의 싸워 승리하겠다”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서 “대구·경북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특단의 지원책 강구...긴급예산 신속집행·추경적극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극도의 혼란상이 펼쳐지고 있는 대구를 직접 찾았다.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직접 현장에서 밝힘으로써 대구·경북 지역사회 민심을 다독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대구광역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마스크를 쓰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회의실에 등장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처음 꺼낸 말은 “대구·경북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와 대책본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특히 밤낮없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대구·경북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국민들도 힘내십시오 함께 극복합시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광우와 전남을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방역물품과 생필품 등을 보내며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국민통합은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인력의 지

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총력지원 체계를 가동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저녁부터 대구에 상주해 현장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을 소개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영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이 지역은 그야말로 복합위기지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 민생경제와 일상생활



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다 함

께 힘을 합치면 넘어지지 못 할 일이 없다. 정부와 국민 모두 대구·경북과 함께하고 있다”라며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함께 극복해 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회 결과 발표로 논란이 된 ‘봉쇄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과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 등 대구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교육감, 임용 합격자 재변복 19일 만에 ‘뒷북 사과’

“고강도 내부 혁신 돌입...임용 시스템 총체적 점검”



2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최근 중등교사 임용 합격자 재변복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중등교사 임용 합격자 재변복 사태 19일 만에 제주도민 앞에 허리 숙여 사죄했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교육감은 25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과 13일 각각 2020학년도 도립 중등학교 교사(체육)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변경 공고를 낸 데 대해 “교육 행

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 13일 내 문단으로 된 A4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신규 중등교사 직무연수에서도 교사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으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육감은 “최근 우리 교육청의 거듭된 업무 실수로 인해 공립 중등교사 임용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도민과 당사자, 응시자, 시험을 준비

하고 있는 예비 교원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고강도 내부 혁신에 도입하겠다. 이번 사태 관련 부서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준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와 교육청의 특정 감사를 통해 지난 10년의 교육 공무원 임용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8일 도교육청의 감사 의뢰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도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조직 개편 등의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이번 일을 소중한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겠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시스템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중등교사 임용 최종 합격자 공고문을 게시했다가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에 변경 공고문을 게시했다.

당일 오후 1시쯤 한 체육과목 응시자의 문제 제기로 성적 처리과정을 재검증해 보니 체육과목 합격자 1명이 A씨에서 B씨로 뒤바

뀌게 된 것이다.

고용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엑셀과 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체육과목 실기평가 점수란에 이번 시험과 관계 없는 실기시험 점수를 잘못 드래그(Drag·마우스로 끌어오기)하는 바람에 이 과목 응시자들의 실기평가 점수가 모두 0점 처리돼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당시 고 과장은 발견된 오류를 즉시 수정해 바로잡았고 다른 과목도 모두 재검토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변숙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13일 브리핑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이번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228명에 대한 성적 처리과정을 자체 감사한 결과 체육과목 응시자 성적 엑셀파일 자체가 잘못 작성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4개였던 실기평가 과목 수가 올해 5개(필수 2·선택 3)로 늘 어났음에도 기존 함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1개 선택과목 성적이 전체적으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체육과목 합격자 1명이 B씨에서 C씨로 한 번 더 뒤바뀌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에 또다시 재변경 공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지자체 재정 집행률 부풀리기 심각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28조3000억원을 교부했지만, 이 중 31.1%(8조8000억 원)은 상반기 중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점검 결과 나타났다. 중앙부처가 실제 집행기관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 조기집행 실적 채우기에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해 이런 문제 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9회계연도 본예산의 경우 중앙재정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집행률 61.0%)보다 높은 집행률(65.4%)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높은데도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밀어내기식 집행(중앙관서 등이 교부성 예산을 집행기관에 교부하면 실제 집행 여부와 관계 없이 집행액으로 집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감사원이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중앙부처의 교부실적과 지자체 집행 실적의 괴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보조금 예산(40조 6000억원) 중 69.7%(2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교부했으나, 지자체가 실제 집행한 규모는 47.9%(19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사업부지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정 집행을 높이기 위해 급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업계획만을

평가해 지자체를 선정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의 절반씩을 다음 연도부터 2개년에 걸쳐 예산에 편성해 교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예산(1121억원) 중 상반기에 65.6%(735억원)을 교부했으나 지자체 집행률은 5.0%(56억원)에 그쳤고, 지난해 9월 말 현재 집행률도 9.1%(103억원)에 불과했다.

또 감사원이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수탁사업비(사업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미집행잔액이 지난 2018년 말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위해 이들 기관에 상반기 수탁사업비를 추가로 교부한 것이다.

서산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난 2015년 3월 ‘서산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총사업비 767억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단에 설계비·공사비 등 수탁사업비를 교부했다. 2018년 말 기준 수탁사업비 미집행 잔액이 530억원이고, 지난해 연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172억원 이기에 서산시는 수탁사업비를 추가로 교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서산시는 조기집행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산 160억원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수탁사업비 미집행 잔액은 522억원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공부문에 묶여 있는 자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코호트격리’...부산 아시아드요양병원 일대는 적막감만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이 곳은 25일 오전부터 거세게 내린 장대비의 영향까지 더해져 발길이 뜸 끊겼다. 병원 출입문에 ‘3월(일)까지 2주간 외래진료를 일시 중단 하오니, 환자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유동 인구가 줄고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주변 상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었다.

인근 커피전문점 점주 A씨는 “평소 매출을 10으로 본다면 지금은 2도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에서 24일 가계 방역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찾는 청주시 충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고 청주 첫 확진자가 운행한 택시 승객 6명의 신원 파악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비난이 일고 있다.

이젠 중국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입국 거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각국 유학생들이 한국 입국을 꺼리고 있다.

25일 대전 대학가에 따르면 당초 초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을 2주 미루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개강 전 입국시켜 대학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해 각국 학생들의 휴학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역대학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할 경우 우송대와 같이 입국을 계획적으로 미루고 온라인 강의를 준비할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한국인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하는 국가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